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2014, 148p. ISBN 9789264206656

금융 위기 이후 5년 이상,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 비율은 많은 OECD 국가의 사회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재정 건전화에 의해 제한되고, 사회 지출 감소는 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한다. OECD 회원국은 충분한 자원에 의한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주요 신흥 경제국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07~08 금융 위기는 경제 및 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도 만들었다. 깊고 긴 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은 직업, 소득 및 생활에의 심각한 파급 효과를 경험하였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은 소득 없는 가구가 두 배가 되고, 청소년과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등 금융 위기가 사회 위기를 만들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고 있다. 또

한, 고령화 및 재정적인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이후 출산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정신 질환 등 건강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적인 사회적 투자를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OECD Economic Surveys: Spain 2014

OECD, 2014, 150p. ISBN 9789264207035

스페인의 생산성은 최근 회복 기초에 있지만, GDP 성장률은 1%로 추정된다. 노동 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정책의 개선을 통해 실업을 줄이고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인의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전이 향후 성장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에는 생산성이 낮은 많은 중소기업과 일

부 중형 및 대형 기업이 있다. 중견 및 중소기업(SME)의 수출은 대부분 유럽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스페인에 곤란한 규제 때문에 기업의 성장에 유리하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외의 금융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경제는 침체가 장기화됐다가 완만한 성장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성장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실업률을 줄이고 대외 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절감을 위해 노동 시장 제도 및 정책 개선,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Geographic Variations in Health Care

OECD, 2014, 416p, ISBN 9789264216594

한 나라 안에서도 보건서비스 이용에는 다소 복잡한 편차가 있다. 어떤 경우 이러한 편차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차이나 환자의 선호도, 혹은 혁신적 치료법의 확산 정도에서 나타나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 나타날 때도 있다. 또한 이러한 편차는 보건서비스의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 혹은 둘 다를 뜻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부 OECD 국가들에서의 고비용, 고분량의 절차들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나라별로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편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편차에는 환자의 선호도와 의료진의 의료관행이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편차의 어떤 부분이 과잉공급을 나타내는지, 혹은 충족되지 않은 보건수요가 있는 지를 설명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적 편차를 둘러싼 이슈와 과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Wage-setting in the Hospital Sector

OECD, 2014, 52p.

DOI 10.1787/5jxx56b8hqhl-en

이 보고서는 OECD 8개국을 대상으로 나라별 보건종사자에 대한 임금설정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나라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묘사하고 최근 몇 년 간의 보건시스템 개혁, 역동적 노동시장, 경제적 압박을 거쳐 오면서 각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유연했는지 혹은 유연하지 못했는지 보여 준다. 회색문헌에 대한 고찰과 나라별 관리들과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진은 경제 침체 전 일부 국가들이 병원종사자들의 임금설정을 병원에 맡기고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옮기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이러한 야망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전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정압박은 특히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을 중심으로 임금 설정의 “재중앙집권화”를 낳았다. 어느 정도 중앙집권화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중앙집권적, 통제적 임금설정이 주는 혜택에 정책 입안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서로 다른 임금 설정방식의 효과

성에 대한 현 연구기반은 제한적이다. 임금설정이 병원의 성과와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잘 이해할 때 보다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Policy Challenges for the Next 50 Year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 OECD, 2014, 68p, ISSN 2226583X

보고서는 OECD 국가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등을 비OECD 국가로 설정하였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향후 50년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의 경제잠재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율 하락, 교육수준은 증가세가 지속되지만 증가속도 둔화, 근로연령인구 비중은 7% 축소 등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세계 GDP 총량은 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들이 증가세를 이끌어 약 35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임금불평등은 국가별로 17%~40% 증가하여 2060년 OECD 평균은 현재의 미국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은 고령화 등에 따른 보건의료, 연금, 교육지출 수요를 추가하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 위기의 유산 등으로 국가 부채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위해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조·재정개혁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흑자국의 저축 감소, 이자율 상승

에 따른 적자국의 투자 감소로 글로벌 불균형 완화가 예상된다.

Can Higher Employment Levels Bring Down Relative Income Poverty in the EU? Regression-based Simulations of the Europe 2020 Target

▮ Mark, I. et al. 2012,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5), pp.472-486.

유럽의 수준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연합의 회원 국가들에서의 높은 고용수준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개념은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Europe 2020 Agenda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높은 수준의 고용이 자동적으로 더 나은 사회통합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인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고용의 증가가 상대적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심각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논문은 고용의 확률과 임금의 회귀분석을 기초로 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한다. 근로가능인구의 75%가 근로를 할 때, Europe 2020 목표에 대해서 상대적 빈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추정하였다. 직업이 없는 가구에 대해 직업을 우선적으로 할당하였고, 추정된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고용의 성장이 반드시 낮은 상대적 빈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이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에 나타난 결과들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고용이 증가할 때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지한다.

- 편역 | 김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라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 연가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